

##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성평등 논의동향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오지영 국제개발연구센터 개발미시연구팀장 (gyoh@kiep.go.kr, 044-414-1270)

박소정 국제개발연구센터 개발협력정책팀 연구원 (sojeong@kiep.go.kr, 044-414-1241)

## 차례

1. 배경
2. 팬데믹 이후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성평등 관련 담론
3. 한국의 성평등 ODA 사업 현황 및 주요 전략
4. 한국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주요 내용

- ▶ 2024년 4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인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으로 통과 및 수립됨.
  - 그동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는 동료검토를 통해 한국의 성평등 전략 부재를 꾸준히 지적해 온바, 이번 전략은 이에 대응하고 한국 개발협력 전반에 걸친 젠더 인식 제고를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 해당 전략은 기후변화, 분쟁 등 복합위기 상황을 고려한 지원 방향성 제시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젠더 이슈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포함된 이슈가 광범위하여 성평등 달성을 위한 한국의 지원 방향성이 다소 모호해질 우려가 있음.
  - 최근 복합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거버넌스 등 타 분야와 젠더 이슈의 연계를 모색하거나 디지털,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함.
  - 뿐만 아니라 성평등 지원 자원 확보,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 및 빈곤 탈출, 거버넌스 또는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확대를 추구하고 있음.
  - 한국의 지원 방향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디지털화와 같이 한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젠더 이슈 해결에 초점을 둔 형태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음.
- ▶ 지침 활용을 위한 강력한 유인 제공, 주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부처 간 협의체 운영, 전면적 홍보·안내·교육 실시 등 해당 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 국내에 다수의 공적개발원조 시행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총괄기관(국무조정실)뿐 아니라 주관기관(외교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및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성평등 전략인 만큼 전면적으로 홍보·안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략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등에 대해 의견 수렴 혹은 부처 간 협의체 운영이 필요함.
  - 이행지침의 활용 방안으로 시행기관별 이행 현황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 심사 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1. 배경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국제사회의 성평등 관련 회의들이 정상화되고, 개발협력 분야에서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

- 국제사회의 젠더 분야 개발협력 담론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회의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성평등 네트워크(GenderNet: Network on Gender Equality)는 2022년부터, UN 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는 2023년부터 대면으로 진행됨.
- 2024년 5월 14일 OECD DAC은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에서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에 대한 DAC 권고안(DAC Recommendation on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all Women and Girl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을 채택함.
  - 권고안을 구성하는 여섯 가지 축(pillar)은 ①포용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성·소녀의 권한 강화와 성평등 촉진, ②성평등 실현 및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 개발, ③성평등을 가속화하기 위한 개발·인도적 지원·평화구축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설계·이행, ④ODA와 다른 형태의 자금을 통해 여성과 소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원 확충, ⑤성평등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학습 메커니즘 확보, ⑥성평등 및 여성·소녀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제도 강화임.<sup>1)</sup>

■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그림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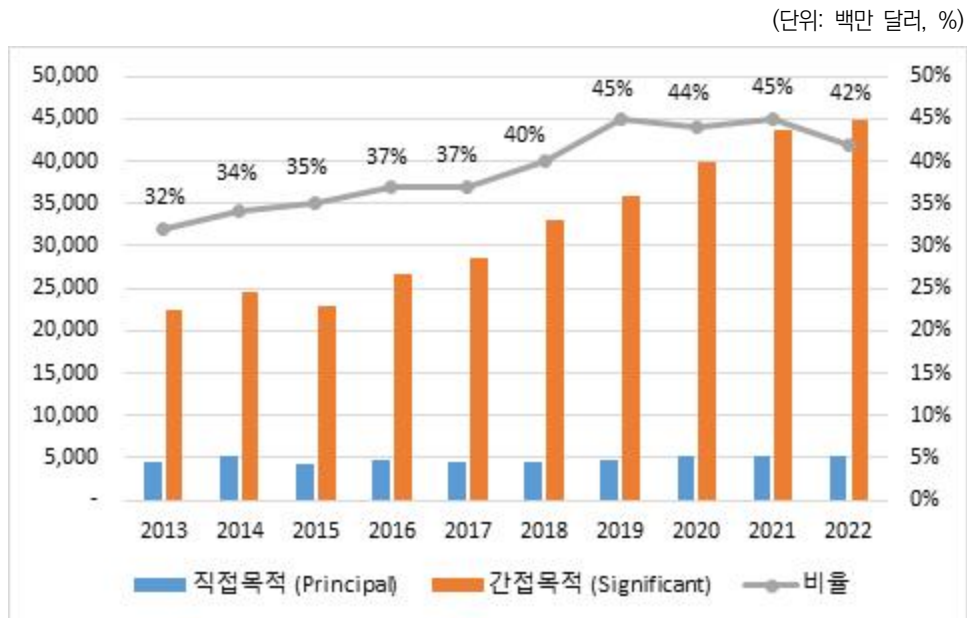
- 젠더마커\*를 기준으로 2016년 이후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ODA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2022년에는 그 비율이 전년대비 3%p 감소함.

\* 젠더마커(성평등 정책마커: gender equality policy marker)는 OECD DAC 회원국이 성평등 원조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도구로서, ODA 사업은 젠더마커를 통해 3가지(직접목적·간접목적·비대상)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목적(Principal, 마커 2): 성평등이 기획과 기대효과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프로젝트/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이거나 명백한 목표인 경우
- 간접목적(Significant, 마커 1): 성평등이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착수 사유는 아니나, 사업의 중요하고 의도된 목표로서 성평등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비대상(Not targeted, 마커 0): 프로젝트/프로그램이 성평등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는 경우

1) OECD,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5022>(검색일: 2024. 5. 21.).

그림 1.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ODA 제공 추이



주: 젠더마커 1, 2(간접목적, 직접목적)에 해당하는 원조액 집계, 변동가격·지출액(섹터 할당 원조) 기준.  
비율은 전체 ODA 대비 젠더마커 1, 2에 해당하는 원조액 기준.  
자료: OECD Stats(검색일: 2024. 4. 29.).

■ 2024년 4월, 한국 최초로 성평등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인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을 수립함(제 4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 2015년 국무조정실은 ‘ODA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 등 실효성에 제약이 있었음.
  - ’15년 적용 지침은 OECD DAC 동료검토의 권고사항<sup>2)</sup>을 바탕으로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 등을 ODA 전반에 주류화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젠더마커 적용과 체크리스트 제시 수준에 불과했으며, ’18년 OECD DAC 동료검토에서 동 지침 활용에 대한 강력한 유인이 필요하다고 지적됨.

■ 본고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분쟁 등 복합위기 속 국제사회의 성평등 관련 논의동향을 바탕으로 지난 4월에 수립된 한국의 범부처 성평등 ODA 전략을 소개하고,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개발협력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2) 제1차 OECD DAC 동료검토(’12년 실시)에서 성평등, 여성 권한 강화 등을 ODA 전반에 주류화하기 위한 계획·지침을 전략체계에 포함할 것을 권고함(OECD DAC(2012), “OECD Development Assistance Peer Reviews: Korea 2012,” p. 12).

## 2. 팬데믹 이후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성평등 관련 담론

### 가. OECD DAC 성평등 네트워크(GenderNet)의 논의동향

- 성평등 네트워크는 OECD DAC 사무국인 개발협력국(DCD: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의 산하조직 중 하나로, DAC 회원국을 포함한 OECD 전반의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지원 활동을 담당하고 있음.<sup>3)</sup>
  - 30여 개 DAC 회원국, 다자기구 등이 매년 한 차례씩 개최되는 정례회의를 통해 젠더 분야 개발협력 주제와 각 회원국의 의견 및 현황을 공유하며, 오는 '24년 11월에 제22차 정례회의를 앞두고 있음.<sup>4)</sup>
    - 정례회의는 회원국만 참석하는 비공개 세션과 다자기구 및 옵서버가 참여하는 공개 세션으로 구분되며, 주로 세 가지 범주의 주제(①전통적인 젠더 이슈, ②신흥 이슈, ③사무국의 진행 과업 경과 및 결과 공유)로 구성됨.<sup>5)</sup>
  - 성평등 네트워크는 개발프로그램에서 성평등 향상과 소녀·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책 및 관습을 개선하고 SDGs 이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성평등 네트워크의 목표: ①개발협력의 품질·효과 및 영향력을 개선하여 성평등에 대한 약속 실천, ②성평등 관점을 DAC 작업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제공, ③여성, 소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평등을 진전시키기 위한 국제 시스템 구축, ④회원국에 경험과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공유하는 포럼 개최
- 현재 성평등 네트워크의 중점 분야는 △성평등 지원 자원, △여성의 경제적 권한 부여, △분쟁 취약상황에서의 성평등, △성착취·학대·희롱(SEAH: Sexual Exploitation, Abuse, and Harassment)<sup>6)</sup> 종식이며, 최근 복합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기후변화·거버넌스 등 타 분야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음(표 1 참고).
  - [21차 회의] 전통적인 이슈와 함께, 복합위기 상황에서 최근 강조되는 이슈들이 논의되었고, 정책 차원을 넘어 사업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다뤄짐.<sup>7)</sup>
    - [SEAH] 사업 현장에서 공여자에 의해 발생하는 성착취·학대·희롱을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관리 위험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며, 파트너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sup>8)</sup>

3) 성평등 네트워크는 1984년 '여성과 개발 전문가그룹(DAC Expert Group on Women in Development)'이라는 명칭으로 창설된 후, 1988년 '여성과 경제작업반(Working Party on the role of Women in the Economy)'과 통합되어 'DAC 성평등 작업반(DAC Working Party on Gender Equality)'으로 변경되었으며, 2003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정착됨. 강선미(2010), 「OECD/DAC 젠더네트의 역할과 활동 현황」, p. 14.

4) 정례회의는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며, 2016년 이후로는 매년 가을에 개최됨. 남청수(2023), 「젠더분야 개발협력의 국제 동향 보고: 제21차 OECD DAC 성평등네트워크(Gendernet) 정례회의 참석 결과」, p. 134.

5) 전통적인 젠더 이슈는 △개도국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젠더 기반 폭력, △국제적 연대/파트너십 등을 포함하며, 신흥 이슈는 △기후변화, △이주, △분쟁·취약성, △교차성(Intersctionality), △현지화(Localization), △데이터, △재원 마련(Financing) 등을 포함함.

6) SEAH란 개발협력 현장에서 공급자 측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비위에 대한 것으로, 2018년도에 개발협력 현장에서 일부 개발NGO 직원들이 현지의 대상 성매수 및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성착취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7) 남청수(2023), 「젠더분야 개발협력의 국제 동향 보고: 제21차 OECD DAC 성평등네트워크(Gendernet) 정례회의 참석 결과」, 『국제개발협력』, 18(2), pp. 136~139, KOICA.

8) 현재 성평등 네트워크는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에서 성착취, 학대, 추행 종식에 관한 DAC 권고안(OECD DAC, 2019)'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행 틀킷을 작성하고 있음.

- [교차성] 사업 이행 과정에 교차적 접근을 적용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간 조정, △다양한 자원의 분배, △전문인력 활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거버넌스] 글로벌 복합위기가 초래하는 취약상황에 대한 공식(formal) 거버넌스와 비공식(informal)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거버넌스가 취약할 경우 정책이나 법제가 예전의 상태로 회귀될 수 있음을 우려함.
- [20차 회의]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 기후변화와 무력분쟁으로 인한 복합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개발 프로그램 내에서 성평등을 향상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짐.<sup>9)</sup>
  - [현장성]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업 현장에 대한 공여국 측의 직접 개입이 제한됨에 따라 현장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현지 여성 단체에 대한 직접적 자원 제공과 상호 경험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데이터] 개발협력과 젠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고 젠더 데이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며, 데이터의 활용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강조됨.
  - [기후변화] 기후변화와 성평등 이슈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해 ‘젠더-기후-환경 연계(the gender-climate and environment nexus: GENDERNET-ENVIRONET Collaborative)’ 세션이 마련되었음.

표 1. OECD DAC 성평등 네트워크(GenderNet) 논의동향

차수	연도	주요 안건
16차	2018	△분쟁 취약지역에서 성평등 및 여성의 참여, △여성 권한 강화, △성착취·학대(SEA), △재원조달,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한 국제 시스템 강화
17차	2019	△분쟁 취약상황 대응(INCAF와 협력), △젠더마커, △재원 조달, △SEAH 권고사항
18차	2020	△팬데믹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각국의 대응, △SEAH 권고사항 이행, △재원 조달, △기후변화
19차	2021	△우수사례, △혁신적 파트너십, △SEAH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툴킷, △투자 확대
20차	2022	△팬데믹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무력분쟁 및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성 증가, △교차적 접근과 현장성 고려의 필요성 증대, △기후변화와 젠더 간 연계, △데이터 확보
21차	2023	△SEAH, △교차성, △전환적 변화(transformative change), △공식적(formal), 비공식적(informal) 거버넌스, △기후변화

주: 2020년, 2021년 회의는 온라인으로 개최됨.

자료: OECD(2019),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16th); OECD(2020),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17th); OECD(2021),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18th); OECD(2022),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19th); OECD(2023),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20th); OECD(2024)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21th).

## 나. UN 여성지위위원회(CSW)의 논의동향

- 여성지위위원회(CSW)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기능위원회 중 하나로 매년 각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대표단이 모여 성평등과 여성의 권한 강화 관련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함.
- CSW는 1946년 설립 이래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UN 산하기관들의 여성 관련 사업을 총괄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96년부터 UN이 채택한 1995년의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활동까지로 역할을 확대함.

9) 남창수(2022), 「이슈리뷰 3」 제20차 OECD DAC 성평등네트워크 (GENDERNET) 참관기, 『젠더리뷰』, 67, pp. 60~62.

-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은 현재까지 국제사회의 가장 진보적인 성평등 증진 의제로, 12개 주요 분야(빈곤, 건강, 폭력, 분쟁, 경제, 의사결정, 인권, 환경 등)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실천전략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CSW는 약 2주간 진행되는 세계 최대 성평등 관련 행사로, 매년 본회의를 통해 국가별 대표단이 정해진 우선 주제(priority theme)에 대해 합의 결론(agreed conclusion)을 도출함.
  - 본회의 외 다수의 부대 행사(side event)와 병렬 행사(parallel event)도 진행됨.
- 2010년대 후반 CSW 우선 주제는 주로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 사회보장제도 같은 이슈가 다양하게 선정되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 디지털화와 같이 글로벌 이슈를 반영한 주제가 선정됨.
- CSW는 필요시 우선적 주제[또는 대주제(main focus)]로 특정 분야가 아닌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의 연계성(60차), 베이징 선언의 이행상황 검토(64차) 같은 글로벌 의제를 선정하기도 함.
- 지난 3월 개최된 68차 CSW는 ‘빈곤 해소와 성인지적 제도 및 자원 강화’를 우선 주제로 선정함(표 2 참고).
- [빈곤]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요인으로 남녀 간 돌봄활동 격차를 인지하고, 돌봄경제(care economy)에 대한 투자를 격려하며, 여성이라는 성별 외에도 장애, 이민, 농촌, 인종 같은 정체성에 따라 다양한 경험과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
  - [제도] 사회보장 시스템을 포함한 성인지적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자원] 여성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여력 및 재정적 여유 확보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부채를 탕감하는 등 성인지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
  - 우선 주제에 대해 UN 회원국들이 도출한 합의 결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동을 권장함.
    - 개발자원 조달 시 성인지적 관점 적용, 성인지적 경제·사회 정책 시행 및 공공기관 강화, 여성과 여아의 빈곤 종식이 목표인 투자 관련 재정적 공간 확대,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 및 확대, 여성 단체 및 집단의 참여 확대와 재정적 지원 제공, 다차원적인 빈곤 데이터 및 통계 강화

표 2. 최근 여성지위위원회(CSW) 우선 주제

차수	연도	우선 주제
60차	2016	여성 권한 강화(empowerment)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계
61차	2017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
62차	2018	농촌 여성·여아의 성평등 및 권한 강화를 위한 과제와 기회
63차	2019	성평등과 여성·여아의 권한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체계, 공공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에 대한 접근
64차*	2020	베이징 행동강령 25주년(Beijing+25) 이행상황 검토 및 도전과제
65차**	2021	성평등과 여성·여아의 권한 강화를 위한 폭력 근절, 여성의 실효성 있는 공적 영역 참여와 의사결정
66차**	2022	기후변화, 환경 및 재난 위험 감축 관련 정책 맥락에서의 성평등과 여성·여아의 권한 강화
67차	2023	성평등과 여성·여아의 권한 강화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혁신, 기술변화 그리고 교육
68차	2024	성평등과 여성·여아의 권한 강화 촉진을 위한 빈곤 해소, 성인지적 제도 및 자원 강화

주: \* 코로나19로 인해 회의 중단, \*\* 코로나19로 인해 하이브리드 형태(비대면 위주)로 진행.

자료: UN Women, CSW, <https://www.unwomen.org/en/how-we-work/commission-on-the-status-of-women/about-the-commission-on-the-status-of-women>(검색일: 2024. 4. 30.).

### 3. 한국의 성평등 ODA 사업 현황 및 주요 전략

#### 가. 한국의 성평등 ODA 추이

- 젠더마커를 기준으로 한국은 지난 10년간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ODA 사업(이하 성평등 ODA, 젠더마커 1과 2에 해당하는 ODA 사업) 규모를 확대해 왔으나, 전체 ODA 대비 지원 비율은 OECD DAC 회원국 중 낮은 편임(그림 2, 3 참고).
- 2019년 이후 한국의 성평등 ODA 규모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성평등 달성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젠더마커 2 사업 규모는 2021년(7%, 1억 4,241만 달러)을 제외하면 1억 달러 미만으로, 전체의 4% 이내에 불과했음.

그림 2. 최근 10년간 한국의 성평등 ODA 사업 규모 및 비율 추이



주: 젠더마커 1, 2(간접목적, 직접목적)에 해당하는 원조액 집계, 변동가격·지출액(섹터 할당 원조) 기준임.  
비율은 전체 ODA 대비 젠더마커 1, 2에 해당하는 원조액 기준임.  
자료: OECD Stats(검색일: 2024. 4. 29.).

- 지난 5년간 한국이 투입한 성평등 ODA 규모는 18억 4,143만 달러로, 32개국 중 15위에 해당함.
  - DAC 회원국 중 성평등 ODA 지원 규모가 큰 국가는 독일, EU, 미국, 일본, 영국 순이며, 이들은 최근 5년간 각각 2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함.
  -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DAC 회원국 중 상위 20위권 이내에 해당하나, DAC 평균 지원 규모(69억 4,074만 달러)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지원해 왔음.



그림 3. 최근 5년간(2018~22년)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ODA 사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주: 젠더마커(직접목적, 간접목적)에 해당하는 원조액 집계, 변동가격·지출액(섹터 할당 원조) 기준임.  
지원 규모가 각각 1,500만 달러 미만인 하위 6개국(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OECD Stats(검색일: 2024. 4. 29.).

- 지난 5년간 한국이 개도국에 제공한 성평등 ODA 규모는 총지출액 대비 21%로, DAC 32개 회원국 중 26위에 해당함(그림 4 참고).
  - o DAC 회원국 중 전체 ODA에서 성평등 ODA 지원 비율이 높은 국가는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네덜란드 순이며, 이 국가들은 최근 5년간 각각 70% 이상을 지원함.
  - o 지원 비율을 기준으로 한국은 DAC 회원국 중 하위 10위 이내에 해당하며, 한국보다 낮은 비율로 지원한 국가는 단 6개국에 불과함.

그림 4. 최근 5년간(2018~22년) OECD DAC 회원국의 성평등 ODA 사업 비율

(단위: %)



주: 젠더마커(직접목적, 간접목적)에 해당하는 원조액 집계, 변동가격·지출액(섹터 할당 원조) 기준임.  
지원 비중이 각 20% 미만인 하위 6개국(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에스토니아, 폴란드)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OECD Stats(검색일: 2024. 4. 29.).

- 한국의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ODA 지원 규모가 지난 10년간 확대되어 왔다는 점은 고무적이거나, 여전히 DAC 회원국 대비 지원 규모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특히 최근 3년간 지원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 나. '24년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의 주요 내용

- 2024년 4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은 성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다뤄져야 하는 주요 분야를 선별하고, 사업단계별 이행방식을 제시함(그림 5 참고).
  - 이 전략 및 지침은 시행기관이 ODA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성평등 실현 및 여성 권한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번 지침에서는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추진계획에 포함함.

그림 5. ODA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

<b>비전</b>			
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한 강화			
<b>목표</b>			
성평등한 ODA를 통한 성차별의 근본적 원인 해소 및 전환적인 변화 추구			
우선 순위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지역개발, 직업훈련, ICT	중점 분야
	2. 인적기반 마련을 통한 여성 기본권 향상	교육, 보건, 공공행정	
	3. 분쟁 및 취약상황 여성 지원	분쟁·재난, 기후변화	
<b>이행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주류화와 성평등 단독목표 사업 시행의 이중전략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단계별 적용방법 및 체크리스트 준수</li> </ul> </li> <li>• 성인지적 지표 개발 및 예산 확대, 성분리 통계 활용</li> </ul>			

자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제4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p. 6.

- [전략목표] '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한 강화'라는 비전하에서 성평등한 ODA를 통한 △성차별의 근본적 원인 해소 및 전환적(transformative)인 변화, △성평등 ODA 선진 국가 도약을 전략목표로 수립함.
  - [성차별의 근본적 원인 해소 및 전환적인 변화 추구 차별적인 제도와 문화가 내재된 사회에서 ODA 사업이 성평등을 위한 전환적 성과를 도출하도록 성별 역학관계, 사회규범, 가부장적 관습 등의 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sup>10)</sup>

10) ODA 사업이 전환적인 변화를 추구하는지 여부에 대해 성평등 스펙트럼을 활용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성평등 ODA 선진 국가 도약] G10 위상에 걸맞게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 ODA를 양적으로 확충하며, 사업 분야를 다각화하고 분야별·지역별 개발협력전략과 국가협력전략(CPS)에 부합하는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 ODA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우선순위] 여성의 경제적 역량, 인적기반 마련을 통한 여성 기본권 향상, 분쟁 및 취약상황 여성 지원 분야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성평등한 경제활동 기회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 직업훈련, ICT 분야에 집중할 예정임.
  - 지역개발을 통한 소득 증대, 양성(兩性)의 직업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식·기술 습득, ICT 역량 강화·경제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고소득 직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함.
- [인적기반 마련을 통한 여성 기본권 향상] 교육·보건·공공행정 분야 지원을 통한 인적역량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대표성 제고를 목표로 함.
  - 여아의 기초교육권 보장 및 중·고등교육 이수율 증가, 여성 부족 분야에 중점 지원, 양질의 보건서비스 접근기반 조성 및 모자보건, 성·생식 건강 보장에 집중,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조성, 젠더 기반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제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임.
- [분쟁 및 취약상황 여성 지원] 분쟁·감염병·기후변화·재해 등 개도국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성평등한 인도적 지원과 평화 구축 지원을 목표로 함.
  - 분쟁·재난 관련 피해 지원, 회복, 재건 등을 위한 사업 수행 시 성평등 및 권한 강화 요소를 포함하도록 하며,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및 재난피해 경감, 성평등한 그린 분야 소득창출 기회 마련 및 기후회복력 증진을 추구함.

■ [이행방식] ODA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성평등을 직접목표로 하는 사업(젠더마커 2 사업)을 확대할 뿐 아니라,<sup>11)</sup> 사업 단계별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세부 방법 및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방침임.

-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사업타당성·기획조사 시 성평등 현황을 검토하여 사업 발굴에 활용하도록 하고, △성 분석 결과 및 성별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목표·구성요소·이행방식 등을 설계하고 위험(risk) 관리방안을 포함하게 하며, △사업 성과프레임워크에 성평등 기대효과 명시 및 측정 가능한 정량·정성 지표를 수립할 예정임.
  - [성 분석] 협력국과의 정책대화·문헌조사·현지조사를 통해 ①성역할 및 책임, ②자원·서비스·기술·정보 접근, ③의사결정 과정 참여, ④돌봄노동과 일상생활의 남녀 간 차이 검토
  - [계획 수립] 대상집단의 수요 반영, 혜택을 동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예산·인력·추진방식·수혜대상 결정, 위험관리를 위한 유연한 사업관리 필요, 통계도구인 젠더마커 부여를 위한 최소요건 충족 검토
  - [지표 설정] 사업이 성평등에 기여하는 바를 투입(input)-산출물(output)-결과(outcome)-영향(impact)에 따라 명확히 제시, 사업 특성에 맞는 지표 수립 및 성별을 분리하여 측정, 차별의 교차성<sup>12)</sup>을 감안하여

11) ODA 전략·정책·사업 전반에서 성평등을 주류화하고,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를 직접목표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

12) 차별의 교차성이란 성별 이외에 빈부·인종·종교·연령·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중첩되어 나타나는 차별 및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임.

다양한 집단에 대한 사업의 영향 고려

- [사업 수행] 적절한 현지 협력방식과 사업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관계자와의 협력을 유도, 모든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양성의 균등한 접근 및 참여로 성주류화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성비위에 대해 예방 및 대응하고자 함.
  - [협력체계] △4대 원칙(①협력국 주인의식, ②결과 중심, ③포용적 파트너십, ④투명성과 상호책임성)에 기반한 파트너십 실현, △성주류화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국 정부·유관기관과 구체적인 방법 논의 및 협력, △수행기관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보하고, 사업 위탁·조달 시 고려
  - [사업 실행] 양성의 참여와 접근성 보장, 사업계획 수정 필요시 융통성 발휘, 지역정부 및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한 개인과 제도 변화 유도, 사업현장에서의 성착취·성희롱 예방책 이행 점검 및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중심의 투명한 대응의 필요성 인지
-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상시적이고 유연한 모니터링 체계 및 간소하고 단순화된 결과보고를 지향하며, 윤리적·참여적으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성평등 관점을 적용한 분석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학습에 활용하도록 함.
  - [모니터링] ①사업 경과 상시점검, ②포괄적이고 유연한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 ③필수 제출 문서 및 데이터 간소화를 통해 모니터링 효율성 제고
  - [사업 평가] 자료취합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보장, 성별·연령 등 인구 그룹별로 분리 수집, OECD DAC 6대 평가기준(△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성평등 관점 적용, 평가 결과 공개 및 향후 유사 사업 기획·수행 개선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계획] 이번에 수립된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을 바탕으로 ODA 시행기관들은 개도국의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 및 개선할 계획임(표 3 참고).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는 관계부처 및 시행기관의 ODA 담당자를 대상으로 젠더마커 검토 및 표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자체평가 양식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등 시행기관이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할 방침임.

표 3.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 추진계획

과제	담당부처
사업 기획 시 성 분석 실시 및 활용('25년~)	전(全) 시행기관
유무상 사업 개요서에 성 분석 결과, 성별 분리통계 및 지표 등 반영 양식 마련(~'25년)	기재부, 외교부
젠더마커 검토·표기에 대한 담당자 교육('24년~)	국조실
3대 우선순위 및 8대 중점 분야 중심의 사업 발굴 및 추진('25년~)	전(全) 시행기관
성주류화(젠더마커 1), 성평등 직접목표(젠더마커 2) 사업 확대('25년~)	
사업 자체평가 양식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25년~)	국조실
개발협력 현장에서의 성비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 마련·추진('25년)	전(全) 시행기관
피해 신고·보고·대응 절차 및 지원책 수립('25년)	
사업 담당자 및 관계자 대상 교육('25년~)	

자료: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제49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국제사회 내 성평등 달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ODA 시행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전략 및 이행 지침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이를 시작으로 국내 성평등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어 추후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 전략은 한국 개발협력 전반에 걸쳐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및 지원 방향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다만 국가 차원의 전략인 만큼 성평등에 대한 전반적 논의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의 성평등 담론과 성인지 감수성 정도,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비교우위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범부처 및 ODA 시행기관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전략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시행 가능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전략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 다. 주요 시행기관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의 주요 내용

- 한국의 ODA 시행기관 중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는 ODA의 성주류화를 위해 기관 차원의 별도 가이드라인 또는 전략을 수립함.<sup>13)</sup>
  - KOICA는 ‘성평등 증진 및 여성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2010), ‘성주류화 가이드라인’(2011), ‘성평등 개발협력사업 방안’(2013) 등을 수립한 바 있으며, ‘제3기 중기전략(2021~2025)’에서 분야별 이슈 중 하나로 성평등 문제를 다루고 있음.<sup>14)</sup>
  -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기반으로 EDCF 성주류화 전략을 수립하고, 젠더 가이드라인에 따라 ODA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확대하고자 함.<sup>15)</sup>
- KOICA는 제3기 중기전략(2021~2025)<sup>16)</sup>을 통해 성주류화를 통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전환적 접근과 여성을 사회 변혁의 주체로 보는 관점을 강조함(그림 6 참고).
  - 농촌개발, ICT, 에너지, 직업훈련, 거버넌스, 평화, 교육, 보건,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등의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를 강조함.

13) 한국의 ODA 시행기관 44개(22년 기준) 중 별도의 성평등 전략이 있는 2개 기관(KOICA, EDCF)에 불과함.

14) 윤지소 외(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성평등 ODA 전략 연구』, pp. 94~95.

15) 위의 자료, p. 98.

16) 제1기 중기전략(2011~2015년)은 KOICA 조직 및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와 조직적 역량 기반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제2기 중기전략(2016~2020년)은 국제사회의 개발의제 동향을 고려하고 SDG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그림 6. KOICA 성평등 중기전략(2021~2025)

비전	성별로 차별받지 않고 존엄성이 보장되는 성평등한 사회 구현		
미션	국제사회의 성평등(SDG5) 달성목표와 개발협력 사업의 성주류화에 기여		
전략 목표	성평등한 경제적 역량 강화	성평등한 사회적 지위 향상	성평등한 기본권 확보
중점 분야	농촌개발, ICT, 에너지, 직업훈련	거버넌스, 평화, 교육	보건, 기후변화, 인도적 지원
프로 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성평등한 분배 시스템 구축 지원,</li> <li>②양질의 직업기회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강화 지원,</li> <li>②성평등한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li> <li>③젠더 의식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성·재생산 건강 보장 및 자기결정권 확보 지원,</li> <li>②젠더 기반 폭력(GBV) 방지 및 피해 지원,</li> <li>③기후변화 및 재난위기 대응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li> </ul>

자료: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21~2025)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및 재구성.

■ EDCF는 ODA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을 확대하기 위해 젠더마커 설정을 권고하고, 성인지 담당관 배정 및 기관 내 교육을 강조함(그림 7 참고).<sup>17)</sup>

- 「성 인지적 관점 적용 기준」(2016)을 활용하여 교육·보건·수자원 등 성주류화가 용이한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우선 적용하고, 사업의 각 단계마다 양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함.<sup>18)</sup>

그림 7. EDCF 성주류화 전략

목표	발전의 기회와 혜택이 남성과 여성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기 위해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필요와 상황이 체계적으로 고려되고 다루어지게 함.		
세부 목표	EDCF의 개발협력 활동을 통해 협력국이 효과적으로 SDGs를 달성	협력과정에서 기본권 보장 및 여성 역량강화 촉진	직원 및 개발 파트너의 성인식과 성주류화 역량 제고
핵심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인권으로서의 성평등,</li> <li>②지속가능한 기반으로의 성평등,</li> <li>③범분야 이슈로서의 성평등,</li> <li>④점진적 접근</li> </ul>		
전략	제도화	역량 강화	결과 기반
실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성평등 우선영역 지정,</li> <li>②한국수출입은행 내에서 성평등과 관련하여 중추적 역할 수행,</li> <li>③프로젝트의 각 단계에서 성평등 주류화,</li> <li>④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지침 수립,</li> <li>⑤내부 지식 관리,</li> <li>⑥다른 기관과의 파트너십</li> </ul>		

자료: EDCF, <https://www.edcfkorea.go.kr/he/HPHYFE062M01>(검색일: 2024. 5. 2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및 재구성.

17) 윤지소 외(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성평등 ODA 전략 연구』, p. 98.

18) 조정화(2018), 「EDCF가 바라본 2017년 동료검토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p. 24.

- KOICA와 EDCF 전략은 ‘성평등 달성’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KOICA는 ODA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면, EDCF는 사업 수행적 측면에서 성인지적 관점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전략의 초점에 차이가 있음.
- 이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과 KOICA, EDCF에서 기존에 수립한 성평등 전략은 공통된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전략 간 일관성이 있으나, 준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세 전략 모두 개발협력사업에서 ‘성주류화를 통해 성평등을 달성하고자 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 유무상 주관기관의 개별 전략과 유무상 통합전략이 같은 방향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임.
  - 다만 이번에 수립된 전략은 중점 분야가 KOICA 전략과 거의 동일하고, 실천사항(혹은 이행방식)의 준위가 EDCF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음.

#### 4. 한국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의 의의와 향후 과제

- 「국제개발협력 성평등 전략 및 이행 지침」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수립한 성평등 전략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존재하나, 범부처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시행기관 차원의 전략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음.
  - OECD DAC 동료검토에서 한국의 성평등 전략 부재 및 젠더 인식 부족이 꾸준히 지적되어 온 만큼,<sup>19)</sup> 이 전략은 이를 개선하고 한국 개발협력 전반에 걸친 젠더 인식 제고를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유무상 통합, 범부처 전략이어야 하는 등 전략 및 지침이 KOICA·EDCF에서 기수립한 전략과 준위 및 내용 면에서 차별성이 크지 않아 EDCF, KOICA 외 40여 개에 달하는 한국 ODA 시행기관의 여건과 특성을 아우르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하거나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하여 전략 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동 전략은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및 주요 젠더 이슈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면,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지원 방향성이 다소 모호해질 우려가 있고, 국내 성평등 담론 및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음.
  - 이 전략은 우선순위에 ‘분쟁 및 취약상황 여성 지원’, 중점 분야에 ‘분쟁·재난 및 기후변화’를 포함하고, 사업 성과 프레임워크에서 교차성을 고려하도록 권고하는 등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요하게 다루지는 젠더 이슈(복합위기, 교차성, SEAH 등)를 다양하게 반영함.

19) 동료검토 보고서(2013), p. 12, p. 13, p. 32, p. 34; 동료검토 보고서(2018), p. 116; 동료검토 보고서(2024), pp. 24~25.

- 또한 DAC 성평등 네트워크와 UN CSW가 공통적으로 다룬 성평등 지원 재원 확보, 여성의 경제적 권한 강화 및 빈곤 탈출, 거버넌스 또는 제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를 전략의 우선순위로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전략에 포함된 이슈가 광범위하여 성평등 달성을 위한 한국의 지원 방향성이 다소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한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젠더 이슈 해결에 초점을 둔 형태로 전략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이 뛰어난 만큼 개발협력에 ‘디지털 시대의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선정한다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제사회의 논의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의 성평등 담론, 기존에 수립된 성평등 관련 정책과의 관계성을 검토 및 고려하여 전략의 이행방식을 단기·장기로 나누는 등, 더욱 한국의 성인지 감수성에 맞게 전략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이행 지침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ODA 사업 선정 시 지침 활용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강력한 활용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후속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를 모색하지 않을 경우 '15년에 수립한 「ODA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 지침」 사례와 같이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시행기관별 이행 현황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업 심사 시 이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추후 전략의 활용 사례를 취합하여 시행기관들에게 공유한다면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제 사업에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구체적인 참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실제로 성평등 네트워크는 최근 젠더마커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례집 제작을 발표한 바 있음.

■ ODA 시행기관별 성평등 및 여성 권한 강화에 대한 이해도 또는 인식이 상이할 수 있는바, 담당자를 대상으로 향후 몇 년간 전면적인 홍보·안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22년 기준 한국 ODA 시행기관은 44개에 달하는데, 시행기관별 인식 및 전략 활용 가능 여부 또는 여건 등의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 발표된 전략에 'ODA 시행기관 담당자 대상 교육'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괄기관(국무조정실)뿐 아니라 주관기관(외교부·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 및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실시한 제3차 OECD DAC 동료검토(2024)에서도 성평등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정책목표로 충분히 인식되고 있지 않고,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개발협력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성평등 및 여성 권한 부여를 전담하는 인력이 부재하다고 지적함.
- 외교부 주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통해 무상원조 시행기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유·무상 원조의 특성에 맞도록 이행계획을 실행한다면 전략의 활용 가능성이 제고될 것임.
- 공무원 순환보직제도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협력 담당자 외에도 기관 전체에 걸쳐 젠더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IEP**